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재시행된다”

두세훈 도의원 “자격보증인 보수 제도 도입 전보다 까다로워져”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두세훈의원(완주 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재시행된다”고 밝혔다.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실시되는 특별조치법은 미등기 토지 또는 등기부상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두 의원은 “특별조치법상 등기 신청서 확인서가 필요함에 따라 확인서 발급에 첨부해야 할 보증서 관련 5명 이상의 보증인을 요구하고 보증인이 해당 부동산 소재지에 25년 이상 거주자이어야 하는 등 종전보다 보증인의 요건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특히 두 의원은 “변호사·법무사를 보증인에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자

격보증인 제도 뿐만 아니라 자격보증인의 보수 제도가 도입돼 이번 특별조치법이 종전에 비해 까다로워졌다”고 평가했다.

두 의원은 “변호사 등 자격보증인 제도와 관련해서는 첫째, 변호사 등이 이번 특별조치법 대상인 1995년 6월 30일 이전의 매매 등 법률관계에 관해 실제적 진실을 알 수 없고 둘째, 종전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이전된 등기에 대해 위조를 원인으로 등기말소청구 소송이 급증한 전례도 있다”며 “이런 이유로 변호사 등이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자격보증인에 위촉되는 것을 기피할 여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도내 시군별 자격보증인 위촉 현황을 살펴보면 전주, 군산 등 7개 시군에만 변호사와 법무사를 자격보증인으로 위촉한 반면 김제,장수를 포함한 나머지 7개 시군은 법무사만 자격보증인으로 위촉한 상태이다.

특히 장수군 등 7개 시군은 단지 5명 이하의 자격보증인만을 확보한 상태

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두 의원은 “14개 시군에 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보증인 인력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격보증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두 의원은 “특별조치법 시행규칙(법무부령)에 따른 변호사 등 자격보증인의 보수제도 관련해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와 자격보증인 간의 450만원 이내에서 보수를 협의할 수 있는 현행 보수산정 방식은 부동산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두 의원은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수수료를 산정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개별공시지가를 구간별로 나눠 개별공시지가에 비해 자격보증인의 보수를 산정하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법무부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유호상 기자

전국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결실’

송 지사, 국무총리 등에 확대 지정 건의… “수재민 일상 복구에 힘 보탬 것” 문 대통령, 중앙합동조사단 정밀조사 거쳐 재난지역 추가 선포 건의 재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취임 첫 행보로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 등 지원 현실화를 꾀하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건의가 전국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로 결실을 맺었다.



도내 집중호우 피해현장을 일일이 방문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살피고 의견을 청취한 송하진 지사는 지난 10일 집중호우 피해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정복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특별재난지역의 현실화 필요성을 건의했다.

송 지사는 “심각한 호우피해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을 고려

해 전국를 특별재난지역 지원기준 수준으로 특별지원할 필요가 크다”며 피해에 따른 차등을 두되 지원은 현실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 지사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에 취임한 뒤 지난 13일 17개 시도지사 공동건의문을 통해 전국의 모든 수해지역에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지원을 건의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공동건의문을 통해 적시에 피해복구가 이뤄지도록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을 확대 지정하고,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금액과 범위를 현실에 적합하도록 대폭 확대하고, 국가 차원에서 소하천과 세천 등에 대한 수해 항구 복구계획을 수립해 국비를 대폭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송하진 지사는 당시 “수해피해가 전국에 걸쳐 발생했지만 특별재난

지역 지정이 일부에 그치고 있어 지자체들이 피해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신속한 복구와 주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피해지역 전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지원을 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중앙합동조사단 정밀조사를 거쳐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는 건의를 재가했다.

송하진 지사는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는 호우피해를 입고 상실감이 큰 주민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데 힘을 보탬 것이다”며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앞으로도 주민들의 필요에 부합하는 정책을 만들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문 대통령 “의료계 위법적 집단행동에 단호 대응”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정부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한 의료진들을 향해 “코로나 확산 저지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라”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 집단행동은 결코 지지받을 수 없다”며 “집단행동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할 수 있지만 합법적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서라도 휴진, 휴업 등의 위법한 집단적 실력 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또 문 대통령은 “공공의료의 확충은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의료인들도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3일 전공의들이 중환자실 확보, 선별진료소 운영과 확진자 치료 등 코로나 진료 필수 업무에 협조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라며 “코로나 위기 극복에 우선 합심하고, 상황이 안정된 후 대화로 해법을 찾고 내민 정부의 손을 잡아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1

김염병 의심되면 '1339'로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들이 24일 코로나 19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도 코로나19 대응 비상상황실과 보건의료과를 찾아, 대응태세를 긴급점검하고 일선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코로나19 종식때 까지 협력 아끼지 않을 것”

도의회 환복익, 감염병 대응 비상상황실 등 찾아 대응태세 점검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연)가 24일 코로나 19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북도 코로나19 대응 비상상황실과 보건의료과를 방문, 대응태세를 긴급점검하고 일선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환경복지위원들은 최근 도내 코로나19 급증에 따라 방역태세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을 위해 응원메시지와 함께 간식을 전달했다.

이명연 환경복지위원장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현장 직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도의회는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에 따른 방역지침을 시행하고 거리두기 이행상황 및 집단감염 위험시설을 점검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고창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도의회 김만기·성경찬 의원

행안부 앞에서 강력 촉구

아산·공음·성송면 추가 지정



전북도의회 김만기(고창2) 예산결산위원장과 성경찬(고창1) 원내대표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고창군 수해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두 명의 도의원은 24일 오후 세종시 행정안전부 청사앞에서 ‘고창군 수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피켓시위를 통해 최악의 수해 참사로 실의에 잠겨 있는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어설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지원 보장책 마련을 요청했다.

김만기 위원장은 “정부가 2차 특별재난지역을 군과 읍·면 단위로 추가선포했으나 고창군 지역은 제외됐다”며

“고창군 지역에서도 농·수산 농가를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만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조속한 피해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경찬 원내대표 또한 “호우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예산과 장비가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복구에 소요된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고 피해 주민들은 재난지원금과 함께 공공요금 감면 등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경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고창군 아산면·공음면·성송면 등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유호상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입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천 환경개선 자원봉사자 모집

문의전화 063-288-9700